

## 광주 공공의료 공백 결국 우려가 현실로

광주의료원 설립 무산 위기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지연  
시립 요양·정신병원 운영난

광주시가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의료 기반 사업이 겹들면서, 우려했던 공공 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공의료체계의 컨트를 타워 역할을 기대했던 광주의료원은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메르스' 이후 설립이 확정된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복잡한 행정절차 등에 발목이 잡혀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이미 설립돼 치매·요양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립 제1·제2 요양, 정신병원마저도 노사 갈등과 만성 적자 등에 시달리며 위탁 운영자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대규모 재난대응 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인프라 공급, 공공의료 체계 컨트론타워 기능을 맡게 될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제성, 정책성, 낙후도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AHP)에서 0.457 점을 받아 통상 통과 기준(0.5 점)을 넘지 못했는데, 이는 지난 5월 탈락한 울산(의료원)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 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 울산, 세종뿐이다.

광주의료원은 총사업비 1970억원을 투입해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 일원에 연면적 3만5916㎡,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필수 의료 중심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계획됐다.

광주시는 경제성 평가에 대비해 애초 350개로 계획한 병상을 300개로 줄이고 광주 의료기금(담배소비세 5%) 신규 조성 등 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강기정 시장이 직접 세종시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 분과 위원회에 참석해 광주의료원 설립 필요성과 문제해결 방안 등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열의까지 보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공공의료원 특성상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울산시와 연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현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 등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15년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 이후 2021년 개

원을 목표로 진행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지하 2층·지상 6층 유효병상 36병상·평상시 98병상) 구축사업도 아직까지 실시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업 지연으로 애초 446억원(국비 414억원, 조세대 32억원)이었던 총 사업비는 780억원(조세대 자부담 199억원)으로 늘어났고, 개원 시기도 2026년 12월로 늦춰졌다. 광주시는 일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건립 예산 58억원을 확보한 만큼 이르면 2026년 말 완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7일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사업'에 대해 사업지연 및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집행예산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자칫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와 맞물려 분석보고서 등을 핑계로 이미 확보한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사업 예산의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집행행률은 2018년 0%, 2019년 0.3%, 2020년 5.1%, 2021년 4.7%, 2022년 2.9%이며, 2023년 8월 말 기준 2.8%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2년으로 압축하면 2022년 이월된 134억 6600만원, 2023년 예산 127억 2600만원 등 총 261억 9200만원 중 2023년 8월말 기준 집행액은 200만원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질병관리청이 이 같은 실적에도 면밀한 검토없이 2024년도 예산안에 전체 공정을 42%를 적용하고, 공사비 등 예산 63억 88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며 다시 검토해 사업 지연 및 예산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와 조세대병원측은 "보고서 내용은 현실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단순 서류상으론 분석한 것으로, 전국 첫 사업이다 보니 행정절차 등이 매우 복잡하고 설계단계 등 업무처리에 28개월 정도 소요됐다"며 "특히 지난 9월 기재부와 사업비 관련 협의 등이 모두 마무리된 만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도 난항이지만, 이미 설립·운영 중인 공공의료 인프라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수탁자인 전남대병원마저 적자누적 등 경영난을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했고, 광주시는 이후 세 차레나 새 운영자를 찾는 공개모집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조 등은 열악한 처우 개선과 광주시 직접 운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등을 반복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000만의 감동...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폐막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7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31일 폐막했다. 28만명인 순천 인구의 35배에 달하는 980만명이 찾으며 '생태 도시'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축구장 270개 규모 193ha에 달하는 박람회장에 역만 송이 국화밭과 맨발로 걷는 어싱길, 동천이 흐르는 호수정원이 펼쳐져 늦가을의 정취를 뽐내고 있다.▶관련기사 2면  
/순천=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尹 “약자 보호·성장동력에 예산투입”

내년 예산 국회 시정연설  
예산안 통과 초당적 협력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남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올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

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항목별로는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 5000억 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을 완화로 3만 2000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초급근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법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본사 인사  
▲ 최권일 : 정치총괄본부장  
▲ 오광록 : 정치총괄본부 부장  
(11월 1일자)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The new EQE SUV

누구도 예상 못한 아우라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65(도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9(도상: 4, 고속도로: 3.7) 1회 충전거리(km) : 404, 공차중량(kg) : 2540, 배터리 용량(kWh) : 88.4  
· EQE 50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8(도상: 3.9, 고속도로: 3.6) 1회 충전거리(km) : 401, 공차중량(kg) : 2510, 배터리 용량(kWh) :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